

# 주간 통일정세

2018-16

## Contents

###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4.8.	'평화수역 염원' 서해 5도 어민들 어선에 한반도기 단다(연합뉴스)
	4.10.	RFA "'북미회담 평화협정 논의' 백악관청원 서명 10만명 넘어"(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	4.10	이병현 대사 "유네스코서 남북관계 좋다...화해협력 노력 확대"(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 가. 남북한

2018. 4. 8.

##### ■ ‘평화수역 염원’ 서해 5도 어민들 어선에 한반도기 단다(연합뉴스)

- 8일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백령도선주협회는 지난 6일 용진군 백령도 장촌포구에서 ‘서해 5도 한반도기’ 게양식을 열고 이 같이 결정함.
- 어민들은 앞으로 안전한 조업과 서해 어장 확장 등 평화수역에 대한 염원을 담아 어선에 서해 5도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달고 조업에 나서는데, 서해 5도 한반도기는 기존 한반도기에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추가한 새로운 깃발로, 인천 시민대책위가 만들었음.
- 백령도선주협회에 이어 대청·연평도선주협회도 이달 중 서해 5도 한반도기 게양식을 열고 조업에 나설 예정임.

#### 나. 국제사회

2018. 4. 10.

##### ■ RFA “북미회담 평화협정 논의 백악관청원 서명 10만명 넘어”(연합뉴스)

-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의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백악관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RFA는 지난달 15일 미국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개설됐으며, 9일(현지시간) 현재 1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했다고 전함.
- 이 청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에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준 것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65년간의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담대한 행동은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RFA는 설명함.

## 2. 남북 교류협력

2018. 4. 10.

### ■이병현 대사 “유네스코서 남북관계 좋다·화해협력 노력 확대”(연합뉴스)

-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이사회 의장인 이병현 주(駐)유네스코 대사는 9일(현지시간) “유네스코에서의 남북 관계도 좋다”면서 교육·문화부문의 협력을 통한 평화증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이 대사는 이날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주최한 집행이사회 의장 취임 리셉션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소프트파워의 원천인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 특히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이 대사는 북한 대표부와는 주요 외교행사와 유네스코 회의 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한다면서 “김용일 주 유네스코 북한대사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돼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한다는 덕담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전했는데, 김용일 유네스코 북한대사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 북·미 접촉의 북측 실무자로 일하는 등 북한에서도 북·미 문제에 정통한 인물로 전해짐.

## I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4.14.	“리용호 북한 외무상, 리 부총리와 ‘나진-하산’ 사업 등 논의”(연합뉴스) 北 김여정, 방북 中 예술단 숙소 방문…“체류기간 성심 다할 것”(연합뉴스) 北 김일성 생일 중앙보고대회…“자위적 군사노선 일관 관철”(연합뉴스)
	4.15.	리용호 北외무상, 타지크 외무와 회담…“양자-국제현안 논의”(연합뉴스)
	4.16.	北신문, 이란 핵협정 언급하며 “이란 입장 전적인 지지받아”(연합뉴스)
	4.17.	北 김정은 부부, 中 예술단 공연 관람…북중 문화교류 발전 언급(연합뉴스)
	4.18.	김정은, 쑹타오 또 면담…“전략적 협동강화 심도있는 의견교환”(연합뉴스) 北 예술단 방남 책임자 권혁봉, 문화성 국장→당 부부장 승진(연합뉴스)
	4.19.	北, 내일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새로운 단계 정책문제 결정”(연합뉴스)
	4.20.	노동신문 “전략국가 지위 당당히 올라…수령 유훈 끝까지 관철”(연합뉴스)
	군사	
경제		특이사항 없음.
사회 문화	4.19.	“北,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9월에 공연”(연합뉴스)
외교 국방	4.15.	미 국무부 “북한 시간별기 허용해주는 비핵화 협상에 관심없다”(연합뉴스) 북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보전 국제기구 동료국 가입(연합뉴스)
	4.17.	“작년 北 국적자에 발급한 美 비자, 2008년 대비 40%”(연합뉴스)
	4.19.	트럼프 “김정은과의 만남, 세계적인 성공 되도록 뭐든지 하겠다”(연합뉴스) 美군축대사 “北 핵포기 위해 제재 유지”…비핵화 재강조(연합뉴스)
	4.20.	EU,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4명 추가제재…“금융사기 연루”(연합뉴스) 유럽의회 한반도단장 “6주 내 방북…핵포기 차근차근 접근해야”(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일자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4.17.	중국 예술단 공연 관람	최룡해, 리수용, 최 휘, 김여정, 박춘남	-
4.18.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쑹타오 면담	-	-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8. 4. 17.

##### ■北김정은 부부, 中예술단 공연 관람·북중 문화교류 발전 언급(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4월 1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여성중대’를 관람하셨다”며 극장에서 송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리진권(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 중국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중국 중앙발레단장 등이 맞이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중국 예술단의 이번 평양 방문이 공동의 재부인 조중(북중)친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예술단과 기념사진을 찍음.
- 이날 공연은 최룡해·리수용·최휘 당 부위원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박춘남 문화상 등 간부들과 당 중앙위 및 문화예술 부문 구성원, 창작가와 예술인을 비롯한 평양 시민 등이 함께 관람함.

2018. 4. 18.

##### ■김정은, 송타오 또 면담…“전략적 협동강화 심도있는 의견교환”(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1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송타오) 동지를 또다시 만나시어 담화하셨다”고 보도함.
- 통신은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께서는 송도 동지와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래왕(왕래)을 활발히 하며 두 당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시었다”고 전함.
- 통신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훌륭한 시기에 진행되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 매우 훌륭한 방문”이었다며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인민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유대와 호상(상호) 존경의 감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조중 문화예술 교류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고 발언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4. 14.

### ■“리용호 북한 외무상, 리 부총리와 ‘나진-하산’ 사업 등 논의”(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간)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의 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부총리실이 13일 밝힘.
- 부총리 공보실은 타스 통신에 “양측이 통상·경제 관계 현황 및 발전 전망, 특히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사업 이행 문제에서의 협력과 상호 교역에서의 금융·운송 문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함.
- 공보실은 “지역 간 관계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경제 분야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임.

### ■北김여정, 방북 中예술단 숙소 방문…“체류기간 성심 다할 것”(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예술단의 숙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김 제1부부장은 쑹 대외연락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환담했으며 중앙발레단 단장과도 만남.
- 김여정 제1부부장은 “형제적 중국 인민의 예술사절들이 평양체류 기간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최대의 성심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 동지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예술단의 공연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함.

2018. 4. 15.

### ■리용호 北외무상, 타지크 외무와 회담…“양자 국제현안 논의”(연합뉴스)

- 타지키스탄 외무부는 14일(현지시간) 시로드취딘 아슬로프 타지크 외무장관이 전날 타지크를 실무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고 양국 협력 현안과 지역 및 국제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 외무부에 따르면 아슬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타지키스탄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평화·안정 유지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함.
- 아슬로프 장관은 또 타지키스탄은 국제법의 틀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철저히 준수할 중요성과 필요성도 강조함.

2018. 4. 18.

■ **北 예술단 방남 책임자 권혁봉, 문화성 국장 → 당 부부장 승진(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쪽을 방문해 공연한 북한 예술단을 이끌었던 권혁봉 문화성 국장이 최근 노동당 부부장(차관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18일 확인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부장과 중국 예술단을 위해 전날 만찬을 마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참석자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 동지, 권혁봉 동지, 김병호 동지, 김성남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성원들’이라고 소개함.
-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13일에 우리 측에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면서 실무접촉 대표단장인 권혁봉의 직함을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권혁봉의 당 부부장 승진은 북한 예술단의 방남 공연 이후, 즉 최근 2개월여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보임.

다. 주요 기관 행위

2018. 4. 14.

■ **北 김일성 생일 중앙보고대회…“자위적 군사노선 일관 관철”(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6회 생일(태양절)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자위적 군사노선’ 관철과 자력자강을 통한 제재 대응을 강조했다.
- 조선중앙TV는 14일 평양체육관에서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의 사회로 개최된 ‘김일성 탄생 106주년 중앙보고대회’ 녹화 실황을 오후 6시 30분께부터 방영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보고에서 “우리 당의 자위적 군사노선을 일관하게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굳건히 다지며 누구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 나가야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핵 보유’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음.
- 이번 중앙보고대회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봉주 내각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평해·태종수·오수용·안정수·박태성·최휘·박태덕 당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함.

##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4. 16.

### ■北신문, 이란 핵협정 언급하며 “이란 입장 전적인 지지받아”(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6일 ‘날로 발전하는 친선협조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미사일 계획을 계속 실행해나가고 있다. 이란은 자국의 미사일 계획이 핵 합의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기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은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이 언급한 ‘핵 합의문’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6개국과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노동신문은 이어 “김일성 동지께서 1989년 5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알리 하메네이와 진행하신 역사적인 상봉은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며 “현시기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반제민주역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덧붙임.

2018. 4. 19.

### ■北, 내일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새로운 단계 정책문제 결정”(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2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이와 관련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18일에 발표되었다”고 덧붙임.
- 북한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고 밝히며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나올 것을 시사함.

2018. 4. 20.

■ 노동신문 “전략국가 지위 당당히 올라…수령 유훈 끝까지 관철”(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0일 김일성 주석의 ‘위대성’을 다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작(勞作·최고지도자의 저서나 담화) 발표 6년을 맞아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 하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 ‘전략국가’ 지위와 선대 지도자들의 유훈 관철을 강조함.
- 신문은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며 우리 조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이 새로운 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우리 당과 인민이 쟁취 한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언급함.
- 신문은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떠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다짐함.

## 2. 군사

###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 3. 경제

###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4.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8. 4. 19.

- “北,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9월에 공연”(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9월 새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북한전문 여행사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새로운 집단체조 공연이 9월에 열린다며 새 집단체조 공연의 제목은 ‘빛나는 조국’이라고 전하면서 “올해 9월에 열리는 집단체조 공연은 그동안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던 집단체조와는 다른 공연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에서 집단체조 공연이 열리는 것은 2013년 9월 이후 5년 만으로, 정권 수립(9월 9일)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것으로 보임.

#### 5.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8. 4. 15.

- 미 국무부 “북한 시간벌기 허용해주는 비핵화 협상엔 관심없다”(연합뉴스)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북미 간 접촉에서 미국 측은 핵

프로그램 폐기를 6개월~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시한을 제시했는가'라는 연합뉴스의 서면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시간별기를 허용해주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힘.

- 이어 "과거 협상에서의 점진적·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며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언급함.
-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이뤄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함.

2018. 4. 17.

■ **"작년 北 국적자에 발급한 美 비자, 2008년 대비 40%"(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미 국무부 통계를 인용해 2017 회계연도에 미국으로부터 B 비자나 G 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55명으로, 2008 회계연도 비자 발급 건수(136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함.
- 특히 방송은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미국 방문 비자를 받은 북한의 일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전했으나, 다만 같은 기간 G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북한 관료는 8명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RFA에 "이슬람 6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료를 제외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모든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힘.

2018. 4. 19.

■ **트럼프 "김정은과의 만남, 세계적인 성공 되도록 뭐든지 하겠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몇 주 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북한과 세계를 위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

를 달성할 경우 북한에는 밝은 길이 있다”며 “이는 북한과 세계에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않으며 결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회담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만약 회담에서 결실이 없으면 각각 (회담장에서) 나와서 우리가 해온 것을 계속하겠다. 그러나 (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함.

#### ■美군축대사 “北 핵포기 위해 제재 유지”…비핵화 재강조(연합뉴스)

- 로버트 우드 미국 제네바 대표부 군축담당 대사는 19일(현지시간)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2020 핵확산금지조약(NPT) 사전준비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또 압박 전략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금을 얻을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임.
- 그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에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힘.

###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4. 15.

- 북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보전 국제기구 동료국 가입(연합뉴스)

-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사무국은 11일 연 관리위원회에서 북한이 36번째 정식 동료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결하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동료국에 통보함.
- 이 기구는 북한이 동료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황해 철새와 습지 보전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특히 넓적부리도요와 붉은가슴도요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의 서식지 공동조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2018. 4. 20.

##### ■EU,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4명 추가제재…“금융사기 연루”(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간) 북한 핵과 미사일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해 금융사기에 연루된 4명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힘.
- EU는 그러나 이날 추가로 제재리스트에 올린 4명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는 20일 발간되는 관보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힘.
- EU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이사회가 4명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면서 “이들 4명은 북한의 핵 관련, 미사일 관련 및 다른 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기적인 금융 관행에 관련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9명, 단체 9명으로 늘었다고 전함.

##### ■유럽의회 한반도단장 “6주 내 방북…핵포기 차근차근 접근해야”(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0일 보도에 의하면 영국 출신의 너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대표단장은 19일(현지시간)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하려고 한다”며 “6주 이내가 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을 이용하지 못해 중국 단둥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외부 공격에 대한 억지 수단이자 자국민에 대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서방 정치인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과 사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임.

# Ⅲ 동북아정세

## ■ 개요

### 1. 한반도정세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18.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동거나...중점은 비핵화 평화협정(연합뉴스)	
		외교부, 폼페이오 방북에 "한미 북한 관련 사안 긴밀 소통"(연합뉴스)	
	4.19.		美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방한(연합뉴스)
	4.20.		미 국무부 "정전협정 공식종식 보고싶다"...중전논의 지지 재확인(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내주초 한미·한일 북핵협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4.14.	송영길 "韓신북방정책 中일대일로 연계 가능...슈퍼그리드 잇자"(연합뉴스)	
	4.18.	"북핵 해결시 中 일대일로에 새 활로...한국 참여도 확대"(연합뉴스)	
	4.19.		中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중국 적극적 역할 원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18.	"韓, 남북정상회담 의제서 경험 배제...미·일에 전달"(연합뉴스)	
	4.19.	정부 "부산 日총영사관 앞 징용노동자상 적절치 않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4.20.		러 "남북 정상회담, 핵문제 등 누적된 문제 해결 촉진하길 기대"(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4.14.		중외교부, 美英佛 시리아 공습 비판...“국제법 기본준칙 위반”(연합뉴스)
			중국, 美 TPP 복귀설 잔뜩 경계...“결코 좋은 소식 아니다”(연합뉴스)
	4.16.		중국, 서태평양 미군 겨냥한 신형 IRBM미사일 전력화(연합뉴스)
	4.17.		中통계국 “미중 무역 마찰, 중국 경제 성장 막지 못해”(연합뉴스)
	4.19.	미중 무역 갈등 완화되나...美 WTO 통한 협상 의향 보여(연합뉴스)	中언론 “북미회담 장소 北원하는 곳으로 해야...베이징도 가능”(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4.19.		‘재팬패싱’ 우려 속 美日 공조 다지기...통상 농곤 ‘신경전’(연합뉴스)
			트럼프 “대일 무역적자 줄일 것...일본 수백억 달러 비행기 주문”(연합뉴스)
			백악관 “트럼프·아베, 北 모든 탄도미사일 포기할 필요 재확인”(연합뉴스)
	4.20.		교도 “트럼프·아베, ‘센카쿠 美방위 의무 대상’ 재확인”(연합뉴스)
			아베, 재팬패싱 “맞지 않다”...“역사적 북미회담 기대”(연합뉴스)
		日언론 “미일, 유엔안보리에 북핵폐기감시위 신설 검토”(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4.14	미 합참의장 “러시아에 시리아 공습 사전 통보 안 해”(연합뉴스)	

		트럼프 “어두운 길 갈지, 문명세계로 올지 정하라”...러시아 압박(연합뉴스)	
			푸틴, 서방 시리아 공습 규탄...“침략행위 논의 긴급안보리 소집”(연합뉴스)
	4.16.	미국, 대 러시아 추가 제재 연기...“트럼프가 제동”(연합뉴스)	
			러, 미의 제재시 ‘맞불’ 제재안 마련...항공·우주 교류 등 제한(연합뉴스)
	4.19.	러시아 제재 연기한 트럼프 “최대한 빨리 제재 단행”(연합뉴스)	
			러시아도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WTO에 제소(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일본</b>
중일 관계	4.16.	中日, 8년만에 고위경제대화...경협확대·자유무역 중요성 확인(연합뉴스)	
	4.17.	중왕이, 아베에 “비핵화·평화체제구축 추진 후 일괄해결해야”(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4.15.	유엔 중국대사, 시리아 결의안 “무력 반대에 러시아 지지”(연합뉴스)	
	4.18.	中, SCO외교장관회의 24일 베이징서 개최...인도·러시아 등 참석(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4.15.	日아베 “고민되네”...시리아 공습 놓고 미러 사이 ‘줄타기’(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8. 4. 18.

#####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동거나...중점은 비핵화·평화협정(연합뉴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났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 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밝혔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닮아 있으며,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일로 볼 수 있음.
- 완전한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중점으로 상정한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이 연내에 나란히 닦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음.

##### ■ 외교부, 폼페이오 방북에 “한미 북한 관련 사안 긴밀 소통”(연합뉴스)

- 외교부는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방북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간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미북 양측 간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 앞서 국무장관 내정자인 폼페이오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함.

2018. 4. 19.

##### ■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방한(연합뉴스)

- NYT는 18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이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를 좁혀가고 있다면서 평양과 비무장지대(DMZ)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양새가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 제외됐다고 보도함.
- 미국에서 어딘가를 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있으나 이는 김 위원장에게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유럽에서는 스웨덴과 스위스 등 제3국 몇 곳을 미 정부가 알아보고 있으나 이곳들은 북한에서 너무 멀어 김 위원장의 낯은 전용기로는 힘들 수 있고, 몽골은 북한에서 가깝지만 가능성이 적다고 이 관리는 밝힘.

2018. 4. 20.

#### ■미 국무부 “정전협정 공식종식 보고싶다”…종전논의 지지 재확인(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6·25전쟁 정전협정에 대한 공식적 종식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언급한 ‘남북한 간 종전논의’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 무엇이 더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두 정부(남북)가 앉아서 회담을 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명명할 수 없다”면서도 “나는 단지 우리가 분명히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밝힘.
- 나워트 대변인은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남북이 논의해야 할 많은 내부 이슈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해한다”며 “우리는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어 “동시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향상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그(문 대통령)는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는 회담의 매우 큰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함.

####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내주초 한미·한일 북핵협약(연합뉴스)

-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내주 초 한미, 한일간 고위급 북핵 협회가 각각 개최 될 예정으로,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서울에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시점에 만나는 만큼 양측은 남북 정상이 논의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체제안전보장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 이에 앞서 이 본부장은 23일 서울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며,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미일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북핵 관련 논의 상황과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나. 한·중 관계

2018. 4. 14.

### ■ 송영길 “韓新북방정책-中일대일로 연계 가능…슈퍼그리드 잇자”(연합뉴스)

-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은 1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新) 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는 서로 연결할 수 있고, 동북아 광역전력망(슈퍼그리드) 구축과 북극항로 개발 등은 구체화할 수 있는 항목이다.” 라고 발언하며 한중 양국의 주요 대외정책 사업을 연결한 방안으로 북방항로 개척과 슈퍼그리드 구축을 의미하는 ‘일도일선(一道一線)’을 제시함.
- 그는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서 슈퍼그리드를 추진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로 확대해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인프라 측면의 협력이 가능하다”면서 “슈퍼그리드 구축, 가스관 연결, 북극항로 연계 등 분야가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신 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중·몽·러 경제 회랑 인프라 구축사업이 상호 협력해 동북아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함.

2018. 4. 18.

### ■ “북핵 해결시 中 일대일로에 새 활로…한국 참여도 확대”(연합뉴스)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중국 동쪽으로 닫혀있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새로운 활로가 뚫려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중국 상하이대 상하이연구원에서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가 개최한 한중협력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으로 일대일로의 동아시아 단절 현상을 극복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힘.
- 김 의원은 18일 중국 상하이대 상하이연구원에서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가 개최한 한중협력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으로 일대일로의 동아시아 단절 현상을 극복할 계기가 마련됐고 “일대일로를 통해 북방개척을 진행중인 중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량 역할을 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를 살려 일대일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2018. 4. 19.

■中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중국 적극적 역할 원해”(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가 남북 간 이뤄지는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하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중국은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사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중국은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각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다. 한·일 관계

2018. 4. 18.

■“韓, 남북정상회담 의제서 경제협력 배제…미·일에 전달”(연합뉴스)

- 한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의제로 삼지 않을 방침을 미일 등 관련국에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 아사히는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경제협력의 전제가 되는 비핵화 문제에 집중,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한국 측이 관련국에 “현 시점에서 경제협력을 의제로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아사히는 “한국 내에서는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 사업과 2008년 7월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며 “그러나 회담에서 남북협력에 대해선 유엔 제재 결의 등을 존중해 경제협력에는 (논의를) 들어가지 않고 인도적 문제나 문화교류 등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함.

2018. 4. 19.

■정부 “부산 日총영사관 앞 징용노동자상 적절치 않아”(연합뉴스)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함.
- 노 대변인은 “관련 지자체에서 이미 대체지를 제시한 것과 같이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도공간인 부산시 남구 소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힘.

- 그는 “외교부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담은 공문을 4월 16일 월요일 부산시, 부산시 동구와 민주노총 등 추진단체에 송부했다”고 전함.

## 라. 한·러 관계

2018. 4. 20.

### ■러 “남북 정상회담, 핵문제 등 누적된 문제 해결 촉진하길 기대”(연합뉴스)

- 러시아가 이달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누적된 문제 해결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힘.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힘.
- 이어 “예정된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추가적 정상화와 핵문제를 포함한 역내에 누적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하며, 그는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실질적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 재개 전망과 연관된 합의를 환영할 것이며, 남북한 파트너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것의 실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8. 4. 14.

#### ■ 中외교부, 美英佛 시리아 공습 비판…“국제법 기본준칙 위반”(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4일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영국, 프랑스군과 함께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시설을 공습한 데 대해 중국은 국제법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함.
- 미화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각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 수호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하는 조치를 피해 가는 어떠한 일방주의적인 군사행동도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위배 된다”고 말하며 “중국은 관련 문제가 국제법의 틀 안으로 돌아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 중국, 美 TPP 복귀설 잔뜩 경계…“결코 좋은 소식 아니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론이 불거지자 중국이 경계심을 잔뜩 내비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주지사 및 의원들로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전해듣고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게 TPP 재가입 문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함.
- 트럼프는 곧 트위터를 통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제안됐던 것보다 상당히 나은 거래여야만 TPP에 가입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는 즉각 일본을 비롯한 다른 TPP 회원국들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허웨이윈(何偉文) 중국세계화센터(CCG) 선임연구원은 “TPP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위한 지정학적 도구로 중국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함.

2018. 4. 16.

#### ■ 중국, 서태평양 미군 겨냥한 신형 IRBM미사일 전력화(연합뉴스)

- 16일 중신망에 따르면 최근 중국 로켓군의 한 미사일 여단부대에서 신형 미사일 장비를 인도받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는 중국이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동풍(東風; DF) 26을 실전 전력화한 것을 의미함.
- 통신은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가 중국이 독자 연구·개발해 완전한 자주적 지식재산

권을 가진 새로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중국의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보장하면서 재래식 탄두로 지상의 중요 목표물이나 해상의 중대형 함정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소개함.

- 명칭을 밝히지 않은 이 신형 미사일은 지난 2015년 9월 중국이 항일전쟁 승전 열병식에서 공개한 ‘등평-26’로 확실시 되며, 특히 ‘괘 익스프레스’라는 별칭과 함께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겨냥한 이 미사일은 한국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갈등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무기이기도 함.

2018. 4. 17.

■ **中통계국 “미중 무역 마찰, 중국 경제 성장 막지 못해”(연합뉴스)**

- 17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싱즈홍(邢志宏)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날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함.
- 싱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중국 경제를 저해할 수 없다”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상승 추세는 미중 무역 마찰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외국인 투자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미국과 무역분쟁 속에서도 중국은 올해 1분기 예상을 웃돈 성장률로 선방했고,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9조8천783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보다 6.8% 증가하며 중고속 성장을 이어감.

2018. 4. 19.

■ **미중 무역 갈등 완화되나··美, WTO 통한 협상 의향 보여(연합뉴스)**

-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1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WTO의 최근 공개 문건에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 1천300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는 의향을 내비쳐 눈길을 끌고 있음.
- WTO 문건은 “중국이 지난 4일 미국의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해 WTO 분쟁 해결 체제 아래 협상을 요구했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아직 실시되지 않아 WTO 분쟁 해결 조건에 맞지는 않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상을 원한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미국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태도를 바꾸고 중국과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의향을 내비쳤다”면서 “미국의 이런 입장은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 **中언론 “북미회담 장소 北원하는 곳으로 해야·베이징도 가능”(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5곳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회담 개최장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북한이 원하는 곳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9일 사평(社評)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또는 그 동맹국은 회담 개최지가 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답판의 기세 측면에서도 북한에 불리하다”고 지적함.
- 환구시보는 “북한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평양”이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북한에 직접 가서 이런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문은 이어 “북한은 이미 대외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의사를 표했지만, 비핵화 과정 중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요구했다”면서 “북한은 회담 개최지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 미국 기세를 눌러 공평한 대화 조건을 만들려 할 것”이라고 분석함.

나. 미·일 관계

2018. 4. 19.

■ **‘재팬패싱’ 우려 속 美日 공조 다지기…통상 농곤 ‘신경전’(연합뉴스)**

- 미국 플로리다주의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북 문제를 놓고 ‘변함없는 공조’를 거듭 확인함.
-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골프 회동 등을 마치고 연 공동회견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의 핵을 제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기로 입을 모음.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지적에서 느껴온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북미 정상회담의 키를 쥐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압박 공조’를 다시금 다짐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남북·북미 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가 흑여 일본이 원치 않는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털어내게 됐다.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임.

■ **트럼프 “대일 무역적자 줄일 것…일본 수백억 달러 비행기 주문”(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머지않아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安倍

菅三)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대일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고, 그것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그는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균형을 찾아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임.

-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들(일본)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많은 비행기를 주문하고 있다”고 밝힘.

#### ■ 백악관 “트럼프·아베, 北 모든 탄도미사일 포기할 필요 재확인”(연합뉴스)

- 미일 정상회담이 북한에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이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영구적이고 확인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함.

#### ■ 교도 “트럼프·아베, ‘센카쿠 美방위 의무 대상’ 재확인”(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회담에서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 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대일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지만 중국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해경국 선박을 종종 진입시켜 양국 간 긴장이 발생하는 곳으로 양국 간 이번 합의는 만일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도발할 경우 미국이 자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중국 측 반응이 주목됨.
-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 주둔경비와 관련해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요구해 온 주일미군 주둔경비 추가 부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임.

■ **아베, 재팬패싱 “맞지 않다”...“역사적 복미회담 기대”(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재팬 패싱(배제)’ 우려를 전면 부정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아베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밝힘.
- 아베 총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에서 뒤쳐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맞지 않다”고 부인하며, 그는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 파괴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 그리고 납치문제를 해결로 이끌기 위한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조기해결을 위해 요구해 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 북한의 납치, 핵·미사일이러는 모든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말함.

2018. 4. 20.

■ **日언론 “미일, 유엔안보리에 북핵폐기감시위 신설 검토”(연합뉴스)**

- 미일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폐기 진전을 감시하는 새로운 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함.
- 아사히는 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미국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하면서도 이행 되지 못했다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북한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함.
- 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외교당국이 대량파괴무기를 둘러싼 이라크에 대한 과거 대응을 이번에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함.

다. 미·러 관계

2018. 4. 14.

■ **미 합참의장 “러시아에 시리아 공습 사전 통보 안 해”(연합뉴스)**

- 미국은 러시아에 시리아 공습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동 참모본부 의장이 13일(현지시간)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던포드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습에 대해 러시아와 조율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미리 통보하지도 않았다”면서 “목표물에 대한 공습에 앞서 이 작전과 관련해 이루어진 유일한 협의는 비행안전보장 채널을

통한 통상적 통보뿐이었다”고 말함.

- 그는 “우리는 갈등 방지를 위한 통상적 채널을 사용했으며 공중(비행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에 이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군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위한 ‘핫라인’을 통해 비행 안전에 대한 경고를 했을 뿐 공습작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하거나 조율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으로 해석됨.

#### ■트럼프 “어두운 길 갈지, 문명세계로 올지 정하라”…러시아 압박(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발표하면서 시리아 정권의 최대 지원국인 러시아와 이란을 동시에 압박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나는 범죄자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장비와 자금을 지원한 책임이 가장 많은 정부 2곳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하며 “이란과 러시아에 묻겠다”며 “어떤 종류의 국가가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를 상대로 한 대량 학살과 연관되고 싶어 하는가”라고 물음.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시리아 화학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세계에 약속했다”며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은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하며 “러시아는 어두운 길을 계속 갈지,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문명국가들에 합류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 ■푸틴, 서방 시리아 공습 규탄…“침략행위 논의 긴급안보리 소집”(연합뉴스)

- 러시아 대통령실 크렘린궁은 14일 서방의 시리아 공격을 비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푸틴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은 안보리의 승인 없이 유엔 헌장, 일반규범과 원칙, 국제법에 모두 어기고, 대테러전 최전선에 있는 주권국가에 침략행위를 저질렀다”고 규정함.
- 그는 “화학공격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방문한 러시아군 전문가는 염소나 다른 화학 물질의 흔적을 못 찾았고, 화학공격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주민을 한 명도 못 봤다”면서 서방이 무력 사용 명분으로 제시한 화학공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2018. 4. 16.

■ 미국, 대 러시아 추가 제재 연기…“트럼프가 제동”(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화학무기 보복공습을 둘러싸고 긴장이 격화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연기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하는 러시아에 대한 신규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의 전날 발언을 부정하는 언급임.
- 러시아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제재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소탕 등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함.

■ 러, 미의 제재시 ‘맞불’ 제재안 마련…항공·우주 교류 등 제한(연합뉴스)

- 시리아 화학무기 보복 공습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맞불’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됨.
- 17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는 최근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 여부를 검토하자, 미국에 대한 제재법안을 마련함.
- 초안에는 항공·우주, 원자력, 식품·농업, 술·담배,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우선 미국을 상대로 티타늄 수출을 금지한 점은 보잉 등 미국 항공기 제작사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또한, 러시아가 우라늄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임.

2018. 4. 19.

■ 러시아 제재 연기한 트럼프 “최대한 빨리 제재 단행”(연합뉴스)

-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연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최대한 빨리” 단행하겠다고 밝힘.
-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해 “그들은 (제재를) 받을 만하다”며 이같이 말함.
- 미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새로운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 **러시아도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WTO에 제소(연합뉴스)**

-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러시아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 19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러시아는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과 WTO에 각각 제출했다. 양자협의를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됨.
- 러시아는 요청서에서 “미국은 수입 철강, 알루미늄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사실상 셰이프가드 발동과 마찬가지로”라며 셰이프가드 발동이 아니라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함.

라. 중·일 관계

2018. 4. 16.

■ **中日, 8년만에 고위경제대화...경협확대·자유무역 중요성 확인(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는 16일 도쿄에서 양국 외교, 통상 담당 장관 등이 참가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고 수입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현안을 논의함.
- 양국은 이날 경제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따른 미중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무역체제 및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경제대화는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되는 점을 계기로 외교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8년만에 열리게 된 것으로 경제대화 재개와 관련해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2018. 4. 17.

■ **중왕이, 아베에 “비핵화·평화체제구축 추진 후 일괄해결해야”(연합뉴스)**

- 일본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강조했다며 중국 외교부가 밝혔음.
- 이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아베 총리에게 “현재 한반도 핵 문제는 일촉즉발 위기 상태에서 현저히 완화된 추세로 바뀌고 있으며 비핵화 방향으로 복귀하고 있다”면

- 서 “이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 노력의 결과로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만하며 북한의 합리적인 안전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정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함.
- 그는 이어 “이를 고려할 때 중국은 쌍케병행 사고에 따라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서 결국에는 일괄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마. 중·러 관계

2018. 4. 15.

### ■ 유엔 중국대사, 시리아 결의안 “무력 반대해 러시아 지지”(연합뉴스)

- 마차오취(馬朝旭)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무력 사용을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영국·프랑스의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러시아가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음.
- 15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마차오취 대사는 안보리 표결이 미국, 영국,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자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면서 “안보리를 피해서 취한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 준칙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시리아 문제 해결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게 됐다”고 지적함.
- 러시아가 마련한 시리아 결의안은 안보리에 상정됐지만 미국과 영국·프랑스가 일제히 거부권을 행사했고 러시아와 중국, 볼리비아 등 3개국만 찬성하며 이 결의안은 서방진영의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억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음.

2018. 4. 18.

### ■ 中, SCO외교장관회의 24일 베이징서 개최...인도·러시아 등 참석(연합뉴스)

- 중국이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4일 베이징에서 SCO 외교장관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 SCO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 화 대변인은 “각국은 SCO 각 영역의 협력과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SCO가 회원국을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로, 오는 6월 칭다오(靑島)에서 열릴 SCO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바. 일·러 관계

2018. 4. 15.

### ■ 아베 “고민되네”...시리아 공습 놓고 미러 사이 ‘줄타기’(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의한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하는 양상임.
-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협조 등을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시리아 공습을 놓고는 러시아가 미국과 정면 대립하는 것이 문제임.
-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과 9월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북방영토에서 양국의 공동 경제활동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대치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힐 경우 모처럼 조성한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임.

# IV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4.17. IOC “유엔 지침 지키며 북한 도쿄·베이징 올림픽 참가 지원”(연합뉴스) 북한인권위원회, 유엔 ‘협리적 지위 획득(미국의소리)	
	4.18. “북한,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9월 공연”...“인권유린” 지적도(미국의소리) 폴란드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전원 송환할 것”(미국의소리) 유엔서울사무소장 “남북·미북 정상회담서 북 인권 다뤄야”(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특이사항 없음.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4.16. “강제복송 위기 탈북민 30명 중국서 석방돼”(자유아시아방송) “탈북민, 남한 체류기간 길수록 만족도·적응성 하락”(연합뉴스) 끝내 못 만나고...상봉 기다리다 숨진 이산가족 연평균 2천400명(연합뉴스)	
	4.17. “일본인 매구미 남편인 남북자 김영남, 한국 모친 평양 초청”(연합뉴스) FT “남북정상회담 기대 속 남북 피해자 가족만 속앓이”(연합뉴스) 국무부, 중국에 탈북자 보호 촉구...“강제 복송 우려”(미국의소리)	
	4.19. 트럼프, 아베에 ‘남북자’ 문제해결 노력 약속...“모든것 하겠다”(연합뉴스) “폼페이오, 김정은에게 한국계 억류 미국인 3명 문제 직접 제기”(연합뉴스) 탈북단체 “중국 당국, 중국인과 결혼해 자녀 둔 탈북여성 30명 석방”(미국의소리) “북 보위원들 탈북민 가족상봉 대가로 거액 요구”(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4.17. WFP “지난달 북 주민 47만 명에 식량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4. 17.

#### ■ IOC “유엔 지침 지키며 북한 도쿄·베이징 올림픽 참가 지원”(연합뉴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엔의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북한의 도쿄,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아담스 대변인은 바호 IOC 위원장의 평양 방문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IOC의 임무는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스포츠는 다리를 놓아 평화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또 IOC는 전 세계 국가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한다며, 정부가 아니라 올림픽 위원회를 통해 일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8. 4. 18.

#### ■ 북한인권위원회, 유엔 ‘협의적 지위’ 획득(미국의소리)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17일 표결을 통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에 ‘협의적 지위’를 부여했다.
- 협의적 지위는 비정부기구(NGO)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돼 얻는 지위로, 이 지위를 가진 NGO는 각종 유엔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등 유엔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이날 표결에 앞서, 공동 제안국들을 대신해 결의안 초안을 소개한 유엔주재 미국대 표부의 켈리 커리 경제사회이사회 담당 대사는 북한인권위원회가 그 동안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 “북한,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9월 공연”...“인권유린” 지적도(미국의소리)

- 북한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는 17일 북한의 새로운 집단체조 공연이 9월 개최된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이 여행사는 새 집단체조 공연의 제목이 ‘빛나는 조국’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집단체조 공연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13년 9월 이후 5년 만임.
-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결합된 북한 특유의 공연은 지난 2007년 세계 최대의 집단체조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음. 북한이 아리랑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집단 의식과 결속력을 고취시키면서 3대 세습을 정당화한다는 것임.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오랫동안 혹독한 환경에서 엄격한 연습을 반복해 거행하는 집단체조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음. 훈련 기간은 거의 일 년 내내 진행되며, 4~6개월 정도는 학교 수업시간을 희생하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고 밝혔음.

#### ■ 폴란드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전원 송환할 것”(미국의소리)

- 폴란드 정부는 내년 말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폴란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지난 22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음.
-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었음. 이와 관련해 당시 폴란드 외무부는 VOA에 북한 노동자 송환을 촉진시킬 계획이라면서도 인권 보호 원칙 등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음.

#### ■ 유엔서울사무소장 “남북·미북 정상회담서 북 인권 다뤄야”(자유아시아방송)

-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은 18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경우 한미 양국이 북한에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 폴슨 소장은 먼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정례화를 요청했음. 상봉 행사 후에도 접촉할 수 있는 서신교환, 전화통화, 정기적 방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북된 한국과 일본 국민의 송환도 요구했음.
- 폴슨 소장은 남북이 지난해 인도적 분야의 협력을 재개한 데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또 북한 당국 관계자들에게는 인권 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음.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4. 16.

### ■ “강제복송 위기 탈북민 30명 중국서 석방돼”(자유아시아방송)

- 지난해 11월 중국 선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관련 강화된 검문검색으로 인해 체포되어 강제 복송 위기에 처했던 탈북민 약 30명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태원 씨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탈북민 30명을 석방시켰다”며 “중국이 북중관계를 우려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긍정적인 소식”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중국이 탈북민들을 보호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평가했다.

2018. 4. 17.

### ■ “탈북민, 남한 체류기간 길수록 만족도·적응성 하락”(연합뉴스)

- 정권·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7일 ‘KDI 북한경제 리뷰’ 4월호에 실린 탈북민의 가치관과 사회 적응성에 대한 연구에서 탈북민의 남한 체류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와 적응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 이 연구는 2003년 이후 탈북한 20세 이상의 탈북민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논문은 “체류 기간이 늘어남에도 적응도와 만족도가 오히려 하락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다 구조적이고 상위의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조언했다.

- 논문은 탈북민들이 순조롭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채용 확대, 가족 단위의 창업 지원, 탈북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등 생애주기별·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끝내 못 만나고...상봉 기다리다 숨진 이산가족 연평균 2천400명(연합뉴스)

- 북녘에 떨어진 피붙이를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숨진 이산가족이 1년에 약 2천400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가족 사망자 가운데 3명 중 2명꼴임.
- 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의제’를 보면 통일부 이산가족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지난달 말까지 총 13만1천531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가 56.0%(7만3천611명)로 생존자를 넘어섰음.
- 이산가족 사망자는 2004년~2018년 3월 연평균 3천600명이었으며, 그 중 상봉 기회를 얻지 못하고 눈을 감은 이산가족은 연평균 2천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산가족 중 고령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하루빨리 이산가족상봉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일본인 메구미 남편인 납북자 김영남, 한국 모친 평양 초청”(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7일 한국의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横田 めぐみ·실종 당시 13세) 씨의 남편으로, 한국에서 납북된 김영남(56) 씨가 한국에 사는 모친 최계월(93) 씨를 평양에 초청할 계획을 북한 당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앞서 김 씨는 지난 2006년 6월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모친 최 씨와 상봉한 바 있음. 통신은 2006년 상봉 당시 함께 했던 김 씨와 요코타 메구미 씨 사이의 딸인 김은경(30) 씨가 할머니 최 씨와의 상봉을 강하게 희망했다면서 최 씨를 초청하는 데 김은경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 FT “남북정상회담 기대 속 납북 피해자 가족만 속앓이”(연합뉴스)

-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없어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체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3천835명의 남한 사람이 북한에 납치돼 3천319명이 돌아오거나 탈출했으며, 516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임. 이중 100여명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됨.

- 납북자 문제를 두고 있는 김규호 목사는 “납북자 가족들은 최소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어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민들을 다시 데려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음.

#### ■국무부, 중국에 탈북자 보호 촉구…“강제 복송 우려”(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중국이 최근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해 구금했다는 국제 인권단체와 탈북자 구조단체들의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음.
- 국무부는 강제 복송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즉결 처형 등 가혹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음. 이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은 보통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성폭행 등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유엔 난민지위협약,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이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2018. 4. 19.

#### ■트럼프, 아베에 ‘납북자’ 문제해결 노력 약속…“모든것 하겠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서 1970~1980년대 발생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납치 문제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당신 나라의 총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그(아베 총리)가 그 문제에 대해 갖는 열의는 믿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 납북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이러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삼국 간에 긴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 **“폼페이오, 김정은에게 한국계 억류 미국인 3명 문제 직접 제기”(연합뉴스)**

-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억류 미국인 3명에 대한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고 AP통신이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앞서 폼페이오 내정자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 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 등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 억류 미국인 3인은 모두 한국계임. ‘적대 행위’ 또는 ‘국가전복음모’ 등의 죄목으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김동철·김상덕(미국명 토니 김)·김학송 씨임.
-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 사건을 언급한 뒤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 명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매우 부지런히 싸우고 있다”며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 **탈북단체 “중국 당국, 중국인과 결혼해 자녀 둔 탈북여성 30명 석방”(미국의소리)**

-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대표는 19일 VOA에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에 연고가 있는 탈북 여성 30명을 석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음.
- 김 대표는 “이번에 다른 때와 변한 게 있다면 60명 중 풀어준 30명이 중국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던 여자들, 그러니까 중국 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줬습니다. 그렇지 않고 탈북해서 홀로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아서 연락처, 보호자가 없던 30명은 북송됐습니다”라고 전함.
- 김 대표는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화 차원에서 이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중국이 국제 인권단체의 강제북송 비난을 의식한 게 아니라 가정 파괴 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임.
-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의 정책이 바뀐 것이라면 매우 긍정적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음.

■ **“북 보위원들 탈북민 가족상봉 대가로 거액 요구”(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에 머물고 있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5일 “최근 북한의 일부 보위성 성원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가족과의 재회를 조건으로 해당 탈북민들에게 최대 20만달러(한화로 2억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음.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대부분의 탈북민 가족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기는 하지만 보위성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엄청나 감히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5. 대북지원

2018. 4. 17.

### ■WFP “지난달 북 주민 47만 명에 식량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의 실케 버(Silke Buhr)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지난 3월 북한 취약계층 약 46만 8천 명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한 달 전인 2월의 약 45만 7천 명보다 1만 여명 늘었으며, 식량지원 규모도 2월보다 3월이 많았음.
- 버 대변인은 지난달 1천 443톤의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 강화식품을 북한주민들에게 지원했다고 밝혔음. 한 달 전인 2월에 지원한 1천 152톤보다 300톤가량 늘었음.
- 버 대변인은 지원규모가 지난 2월보다 3월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지원 목표에는 부족하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음. 특히 북한 내부로 송금하는 돈줄이 막히거나 구호식량을 보낼 화물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